

국민권익위-한국투명성기구-한국부패학회,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 도약’ 반부패전략 논의

- 10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2022. 2. 10., 국민권익위)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반부패·청렴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상학·퇴휴), 한국부패학회(학회장 조재현)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1년 국가청렴도(CPI) 결과 분석과 향후 반부패 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사회는 문형구 반부패 협력대사 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발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정주 한국부패학회 편집이사가 맡았다.

이상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청렴도 점수가 62점, 18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라며, “2017년 이후 5년 동안 8점 상승해 상승률 4위로 OECD 등 주요국가 중 가장 빠르게 상승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평가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부문과 경제활동 관련 지표에서 일정한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표는 아직도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을 비롯한 상층사회의 공정논란, LH 등 공공기관의 부패,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과 불공정 관행 등이 국가청렴도 상승을 제한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주 한국부패학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고 OECD 국가 중 가장 큰 개선을 보였지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70점대라는 점과 경제수준에 비해 청렴도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 상승추세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반부패정책을 전통적 뇌물 등에서 공직자의 책임성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포함한 프레임 전환 ▲부패통제시스템의 적발·처벌 중심에서 가치 중심의 청렴으로 변화 ▲범정부내 반부패 기능 조정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의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애진 국립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미경 서울신문 경제부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실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나섰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5개 부패관련 법령 체계의 재조정과 공직 윤리기능의 일원화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애진 교수는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볼 때 기초자치단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경험률’이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정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경제부장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이 부패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면 인지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와치독’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반부패·청렴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데 원칙의 일관성, 정책의 지속성, 상시적인 시스템 구축 및 효과성 점검과 국민의 체감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퇴휴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 동안 국가 청렴도가 빠른 속도로 향상됐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반부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간 우리가 함께 걸어온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반추하고 반부패 청렴의 미래를 설계해 세계 20권을 넘어 세계 10위권의 청렴선진국 실현을 하루속히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가청렴도 역대 최고, 공직·민간분야 부패 해소 위해 더욱 노력해야”

- ‘2022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국가청렴도 후속대책 등 논의 -

(2022. 2. 10., 국민권익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모습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의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등 을 논의했다.

*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요 >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2018년에 설립돼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
- *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한변협, 한국감사협회 등 6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학술단체,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공공분야를 포함, 총 37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청렴도에서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 '17년 51위(54점) → '18년 45위(57점) → '19년 39위(59점) → '20년 33위(61점)

상승세의 요인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다만 협의회는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국가청렴도 세부 지표 중 IMD*지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하락하여 OECD 평균인 63.2점보다도 10.2점 낮은 53점으로,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패 발생 요인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IMD: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지수(국제경영개발원 조사)
· 50점('18년) → 54점('19년) → 57점('20년) → 53점('21년, OECD 평균 63.2점)

또 경영부문 관련 부패를 나타내는 WEF* 지수의 경우 지난 3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상승했으나 OECD 평균 63.9점에 비해 2.9점 낮은 61점으로 기업 청렴윤리경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WEF: 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서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정도 및 공적기금의 유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세계경제포럼 조사)
· 56점('18년) → 55점('19년) → 54점('20년) → 61점('21년, OECD 평균 63.9점)

협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노력과 민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제도운영 기반 갖추도록 운영지침 배포

- 14,900여개 공공기관, 신고 접수·처리 등 세부절차,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마련해야 -

(2022. 2. 18.,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

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정했다.

또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에서 금지한 공직자의 의무를 이행·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운영지침에 따른 공직자의 신고, 공공기관의 접수·관리, 국민들의 법 위반행위 신고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대상인 14,900여개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표준안)을 18일 배포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전원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시 중복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화된 시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에 따른 10가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정 직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적극 실시해 왔다.

오는 4월에는 법령해석 기준과 빈발질의 등을 담은 업무편람을 제작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 유형별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관별 자체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관행적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으로 하위법령이 완비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의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해 전문가와 협약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

- 한전·LH 등 6개 공기업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개발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5월경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세부 지침 배포 예정

(2022. 2. 2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정책 간담회 개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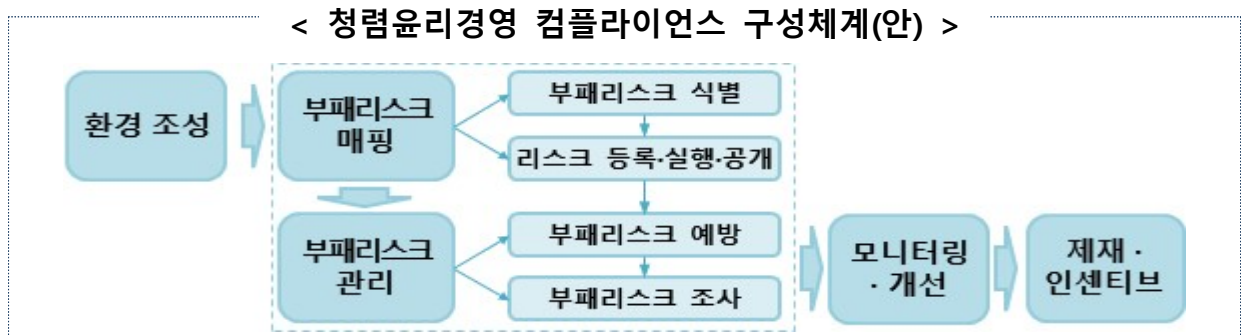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매뉴얼과 운영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 기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3조(기업의 의무) 등에 근거하여 '21.4월 반 부패·청렴 혁신과제'로서 개발 착수(전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와 청렴윤리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6개 공기업과 전문가 5인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정책 간담회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개선해 5월경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내·외 문헌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매뉴얼(세부 지침서) 초안을 개발했다.

매뉴얼에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지표, 운영실적 심사기준, 평가·인증 등 운영방안을 담았다.



국민권익위는 매뉴얼 배포에 앞서 4월까지 6개 업무협약기관과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한전, LH 등의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중점 추진사항 및 보완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5월 매뉴얼 배포 이후에는 ▲ 20개 희망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실적 심사·평가 ▲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국민권익위 포상 ▲ 공공기관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구로서 경영부문 투명성 제고와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착수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인증체제 마련이라는 긴 여정의 큰 반환점으로 오늘 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렴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공수처 업무협약 체결, 내부고발자 보호, 수사 관련 권익침해 해소위해 힘 합친다

- 전현희 위원장, 업무협약 체결 후 공수처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강연 시행 -

(2022. 2. 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공수처 업무협약 체결 모습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지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수처법’ 상 내부고발자의 비밀 보장과 징계·해고 등 불이익으로부터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포상금·구조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공수처법’에서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 내부고발 사건 접수·진행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제도의 빠른 정착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내부고발에 대해 접수단계부터 수사단계까지 신고자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고,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등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공수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 미준수, 불합리한 처리 지연 등 수사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 조사·처리에 있어서도 상호 적극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재 경찰 수사 관련 ombudsman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수처 ombudsman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 수사절차에서 국민 권익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공수처도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법을 준수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와 공수처 간의 업무협약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국민들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수사기관 ombudsman 역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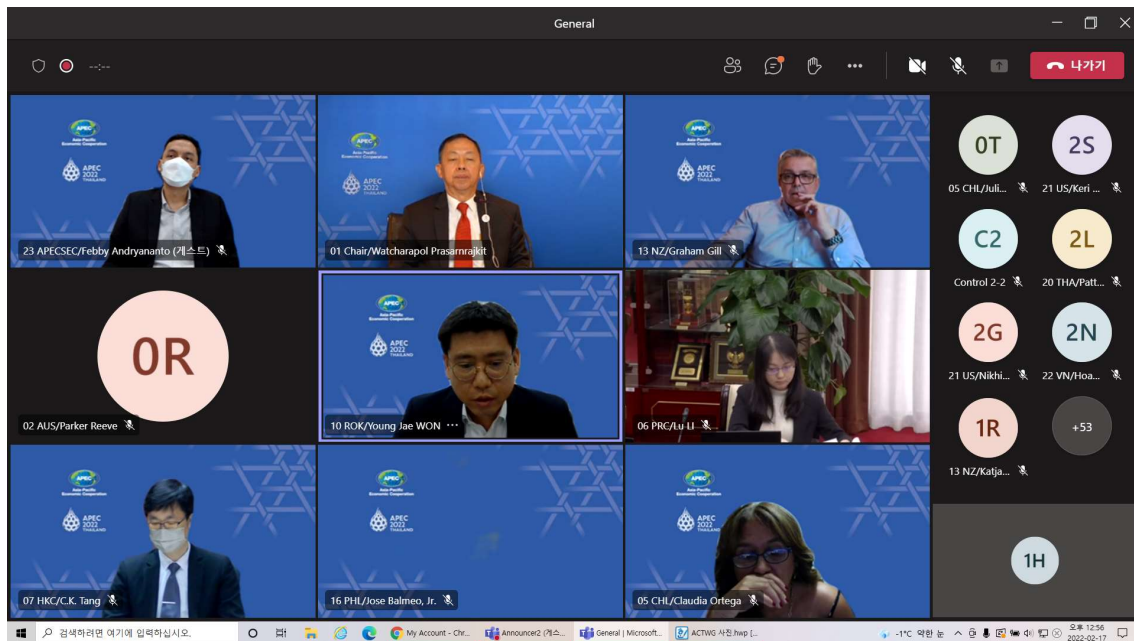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이해충돌방지법·청렴포털’ 소개

- APEC 의장국 주관 워크숍(15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17일)에서 발표...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 참석 -

(2022. 2. 15., 국민권익위)



제34차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 모습

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하는 제3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주관 워크숍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과 17일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APEC 의장국 주관 워크숍과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태국은 반부패위원회(NACC) 주관으로 15일 ‘부패에 대한 디지털 혁신’ 워크숍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부패예방 및 통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렴포털(www.clean.go.kr)’ 운영 경험을 발표한다.

워크숍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기관 대표단, UNDP·국제반부패아카데미·아시아개발은행 등 전 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가한다.

이어 17일에는 제34차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 활동계획과 2023-2026 전략계획 수립, UN반부패협약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해 올해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정부 대표와 OECD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ACTWG) 회의는 21개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두 차례 개최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널리 알리고 이를 여러 나라와 공유해 전 세계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국내 경영 외국기업 고충 해소 나선다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방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2022. 2. 2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현장 간담회 개최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외국기업이 국내 경영 활동에서 느끼는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임원진과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간담회에는 국민권익위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과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로키 유(Rockey Yoo)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의 회원사들이 겪는 국내 행정 관련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와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1995년 한국과 연관된 경제 활동을 하는 캐나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이다.

이번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 간담회는 지난 달 개최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임원진과의 간담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제안된 운전자보험 면책대상 범위 합리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 정책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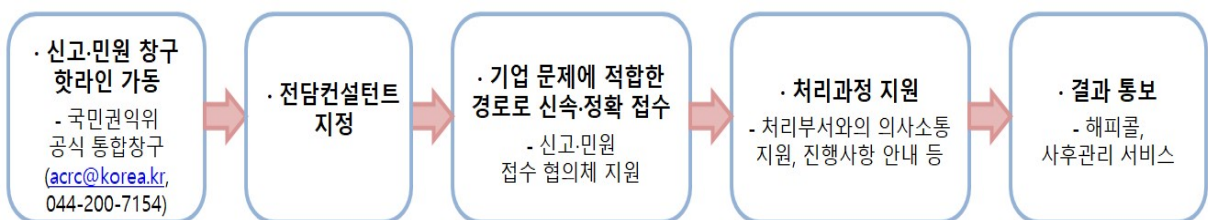
박계옥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은 “캐나다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랜 동반자이다. 한국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더 나아가 그 고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 전용창구

△ 전자우편(email) : acrc@korea.kr

△ 전화: 044-200-7154

△ 운영절차:



튼튼한 국민편 국민권익위, 권익구제 강화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공론의 장 열어

-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등과 토론회 개최, 제도운영 방향 논의

(2022. 2. 11., 국민권익위)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모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오후 2시 대
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급변하는 행정환
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한 학계 전문
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및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이에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를 넘
나드는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의 부당성 판단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임영호 변호사는 ‘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심판 불복제도(재심청구)의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균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 김영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권익위 체제에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는데 2017년에는 간접강제제도를, 2018년에는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각각 도입하였고, 처분의 ‘위법성’을 넘어 ‘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기 시작하여 인용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들이 행정심판기관 소관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 때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 방안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행정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권익 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이에 한국의 행정심판 제도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